

축산식품 가공관리업무 일원화

배 상 호

대한수의사회 사무처장

I. 서론

우리나라의 식품소비형태는 주로 주식인 쌀, 보리 등 곡류와 함께 채소를 부식으로 한 농산물 위주의 전통적인 동양 식생활문화를 영위 해 왔으며, 육류와 우유 등 축산물을 위주로 하는 서양 식생활문화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60년대 들어서면서 지속적인 경제개발계획추진 이후 세계역사상 유래없는 급속한 경제 성장을 이룩하여 왔으며, 식생활 양식도 많은 변화를 가져와 곡물중심의 식품소비형태에서 축·수산물을 비롯한 채소·과실 등의 소비형태로 점차 전환되어 가고 있다.

(표 I-1 참조)

또한 축산업과 축산물가공업도 '70년대 이후 괄목할 성장을 거듭하여 왔으며, 식생활에서 축산식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뚜렷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의 욕구는 양적인 소비에 만족하지 않고 안전성이 확보된 고품질의 식품을 선호하게 되었다.

축산식품의 특성은 고단백·고영양식품인 반면에, 미생물에 오염시 빠르게 증식되어 부패·변질이 용이하고, 가축에서 육류와 우유를 통하여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수(人獸)공통전염병이 있으며, 병원성 식중독과 기생충 등이 전파될 수 있으므로 미국, 캐나다, 영국, 프랑스, 호주 등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 1차 생산부서인 농업부에서 가축의 사육에서부터 도축(원유의 점유)·가공·유통에 이르기까지 수의전문조직에 의해 일관성있게 체계적으로 위생관리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는 1948년 정부수립과 동시 농림부에 축정국을 설치하여 축산물의 생산·가공업무를 관장하였으며, 보건사회부에서는 일반식품의 제조관리업무를 관장하여 왔으나, 1985.7월부터 축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한 관리업무를 보건사회부로 일원화 한다는 방침 하에 보건

(표 I-1) 연도별 식품의 소비현황

(단위 : Kg)

종류 연도	곡 류	육 류	우 유	계 란 (개)	수산물	채 소	과 실
1970	219.4	5.2	1.6	77	17.3	59.9	10.0
1980	195.2	11.3	10.8	119	27.0	120.6	21.8
1990	167.0	19.9	42.8	169	36.2	132.6	41.8
1997	158.8	29.3	52.1	189	65(추정)	145.0	57.9

※ 농림업 주요통계 (농림부, 1998)



사회부로 이관되었다.
 이후 축산식품의 이원화관리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여러 생산자·소비자단체의 건의에 따라 『농어촌발전위원회』와 『행정쇄신위원회』 등에서 농림부로의 일원화를 결의하게 되었고, '97.5월 정부입법추진이 보건복지부의 반대로 유보되자, 생산자·소비자단체의 입법청원에 따라 국회 본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97.12.13 축산물가공처리법 전문개정안이 공포되었다.
 본 논고에서는 축산식품 가공품관리업무 일원화 추진배경과 당시의 추진상황을 생생히 기술하여 본 업무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강조함으로써 축산식품의 체계적인 위생관리를 통한 안전성 확보로 국민보건위생은 물론 국제경쟁력강화로 축산산업발전을 기대하고자 한다.

II. 축산식품 위생관리체계 변동 경위

① 우리나라

① 고려시대 ~ 일제시대 (1910~1945)

우리나라는 농경문화민족으로서 주로 농사를 지어 생활해왔으며 목축업은 육류와 우유의 자가 소비를 위한 부업형태로 일부 이용되어왔다. 특히 소에서 젖을 짜서 이용한 것은 고려말부터이며, 해공왕시대에 우유소라는 기록이 있고, 왕실에서 주로 보약과 같이 사용되었다.

1909.8월 이전에는 농상공부에서 가축의 사육과 도축업무를 관장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도살규칙”을 개정하여 내무부에서 관장하였다.

② 해방 이후 미군정시대 (1945~1948)

1945.9월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주한미군 군정청 위생국 수의과에서 가축의 도살과 축산물의 가공업무를 담당하였으며, 1945.10월 보건후생

부 수의국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1946.3월 수의 국내 방역과와 위생과를 설치하여 가축방역 및 도축·가공업무를 담당하였다.

③ 정부수립 이후 제5공화국 이전 (1948~1985)

1945년 9월 정부조직법을 제정하여 주한미군 군정청 위생국 수의과를 설치하여 가축방역 및 도축·가공업무를 이관하였으며, 1962.10월 축산물가공처리법을 제정하여 가축의 사육·도축(집유) 및 가공업무에 대한 체계적인 제조 및 위생관리업무를 농림부에서 관장하고, 보건사회부는 식품위생법에 의거 해 일반식품에 대한 제조 및 위생관리업무를 관장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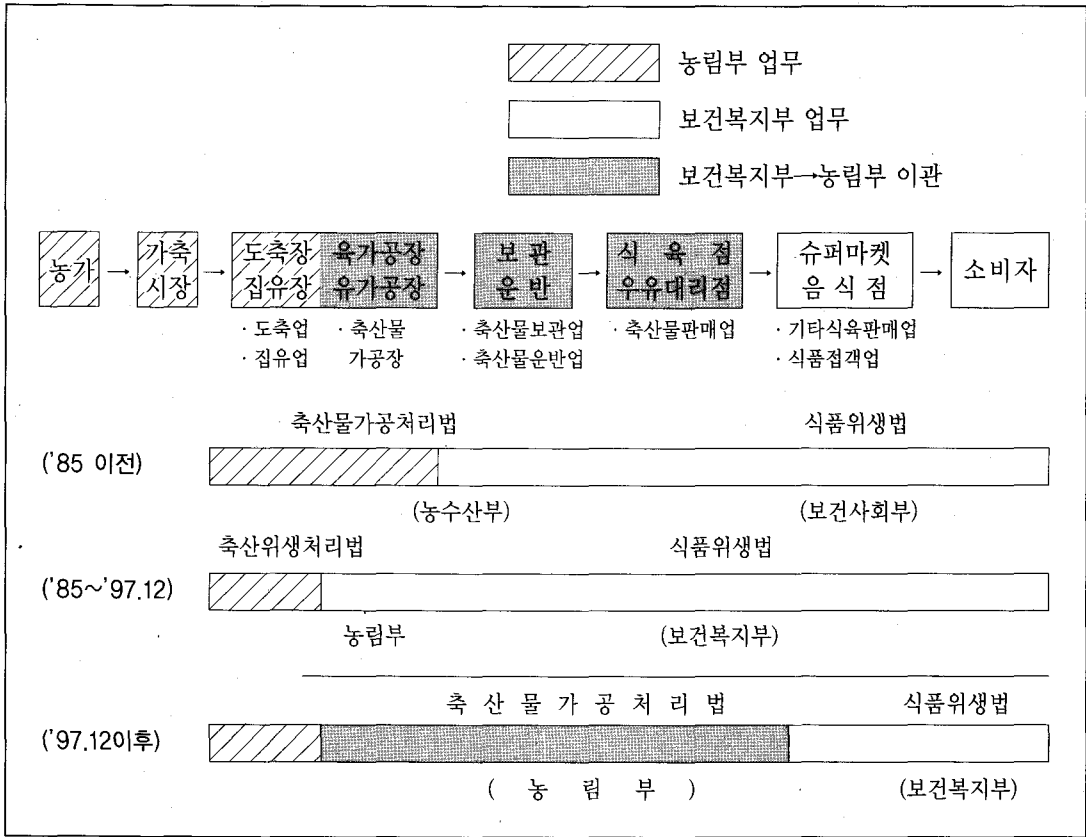
④ 제5공화국 이후 제7공화국 이전 (1985~1997)

1984년 국무총리실에서 “농수산물 가공식품의 관리제도 개선계획”을 주관하여 공청회 한번 없이 내무부장관, 농림수산부장관(박종문), 보사부장관(김정례), 충무처장관 합의를 거쳐 대통령비서실장(강경식) 결재 후 7.19 대통령(전두환) 재가를 받았으며, 12월 국회에서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식품위생법개정안을 각각 통과시켜 1985.7월부터 축산식품가공업부가 보건복지부로 이관됨으로써 축산식품관리에 있어 도축(원유의 집유)과 가공업부가 이원화되는 세계 유일의 국가가 되었다. (그림 II-1 참조)

② 미 국

① 미국은 당초 농무부(USDA)에서 모든 식품 및 의약품관리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식품 및 의약품업무의 중요성 때문에 보건후생부(USDHS)에 식품의약품청(FDA)을 설치하였으며, 축산식품에 관하여는 농무부의 식품안전검사처(FSIS)에서 “연방식육검사법” 및 “가금제품검사법”에 의거 최고

(표II-1) 축산식품 관리체계 변동상황



기, 돼지고기는 2%, 닭고기는 3%이상 혼합된 식품의 제조 및 위생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다.

② 미국보건후생부 산하 식품의약품청(FDA)의 역사

1862년 농무부에 화학국(BOC)을 설치하여 식품의약품법(Food & Drug Act)에 의거 해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1930년 식품의약품청으로 승격하였고, 1940년 농무부에서 연방안전처(Federal Security Agency)로 이관되었으며, 1953년 연방안전처가 보건·교육 및 후생부로 승격된 후, 1988년 식품의약품청법 제정에 의거 해 보건후생부의 산하 조직으로 편제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③ 식품안전 관련조직의 단일화 방안

'93.3월 엘고어 부통령의 책임 하에 실시한 국가 업무평가에서 농무부, 보건후생부, 환경처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 식품안전 관련조직을 단일기구(Single Agency)로 통합하는 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으나, 미 행정부가 의회에 통합법률안을 제출한 바는 없으며, '96.7월 클린턴 행정부의 농무장관은 농무부 식품안전검사처(FSIS)의 조직개편 및 기능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이 조치와는 별도로 '93.8월 듀렌버거 상원의원등이 농무부, 보건후생부, 상무성, 내무부 등에서 관장하는 식품안전기능을 통합한 독립된 단일기구(Food Safety Inspection Agency)의 창설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③ 그 외에 국가

캐나다는 1992년 농업부를 농업 및 농산식품부로 개편하여 산하에 식품검사청(CFIA)을 설립하였으며, 축산식품을 포함한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검사와 동·식물위생검역업무를 통합관리하고 있다.

프랑스는 농수산식품부의 식품 및 동식물검역차관보 산하에 식품검사원(CNEVA)이 설치되어 있으며, 동·식물검역 및 식품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영국은 농수산식품부의 수의국 산하에 중앙수의검사원(CVL)이 설치되어 동·축산물의 검역 및 축산식품의 검사업무를 총괄하고 있으며,

네덜란드는 농수산식품부 산하에 식품검사청(FIA)을 설치하여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를 관장하고 있고,

아르헨티나는 경제부 산하에 국립가축위생성(SENESA)을 설치하여 모든 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업무와 동·식물검역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표 II-1 참조) (표 II-2 참조)

(표 II-1) 각국의 수의행정 및 시험·연구조직표

국가명	중앙행정조직	시험·연구조직	비 고
미 국	농무부(USDA) · 식품안전검사청(FSIS) · 동식물검사청(APHIS)	· 국립수의검사소(NVSL) · 국립동물질병센터(NADC/ARS)	· 지역사무소(5) · 지구사무소(26)
캐나다	농수산식품부(MAFF) · 식품검사청(CFIA) - 동물위생국 - 식품검사국 등 7부서	· 동물질병연구소 등 6개연구소	· 지역별 가축위생연구소 식품위생연구소
영 국	농수산식품부(MAFF) · 수의국(V.S)	· 중앙수의연구원(CVL) - Pirbright, Weibridge	· 지역수의검사소(3) 지구사무소(27)
프랑스	농수산식품부(MAFF) · 식품·동식물검역차관보	· 국립수의식품연구원(CNEVA) - 소 병리연구소 등 9개소	· 지역위생시험소(100)
덴마크	농수산식품부(MAFF) · 수의식품청(FIA)	· 식품위생연구소 등 5개소	· 지역위생시험소
호 주	1차산업에너지부 · 검역검사청(AQIS)	· 가축위생연구소 등 2개소	
아르헨티나	경제부 식품차관보 · 국립가축위생청(SENESA)	· 중앙위생연구소(SENESA부설)	
일 본	농림수산성 · 축산국 가축위생과	· 동물검역소 · 가축위생시험장 · 동물약품검사소	· 동물검역소 지소 · 현 가축위생시험소

(표 11-2) 각국의 관리체계 및 우리나라의 선택대안 검토

<p><유럽형> 축산물과 일반식품을 통합관리 농·축산물의 생산·가공 및 위생관리업무를 농수산식품부(또는 1차 산업부)에서 일원화 관리 (적용국가) : 영국, 프랑스, 화란 등 EU, 아르헨티나, 브라질 등 남미국, 캐나다, 호주</p>
<p><미국형> 축산물과 일반식품을 분리하여 관리 가축의 생산 도축 가공 및 위생관리 업무는 농무부, 일반식품의 위생관리업무는 후생부에서 관장 ※ 미국은 농무부(FSIS)에서 육류(2-3%)가 함유된 축산식품위생관리담당, 후생부(FDA)에서는 일반식품 위생관리 담당 (적용국가) : 미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멕시코, 태국 등</p>
<p><일본형> 가축방역과 축산물위생관리 이원화 농림수산성은 가축의 사육 질병관리 등 생산지원을 담당 후생성은 도축(집유)·가공·유통을 전문수의조직에서 위생관리 (적용국가) : 일본, 벨지움 등 ※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 수의조직이 없으며 일반 보건직 공무원이 위생관리업무 관장</p>
<p>결 론 축산물 및 가공품에 대한 생산과 위생관리일원화를 위한 현실적 대안은 '85이전과 같은 「미국형」이 바람직함.</p>

Ⅲ. 『농어촌발전위원회』 건의 및 조치내용

① 위원회 구성 및 활동상황

① 구성목적 및 기능

농어촌발전위원회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에 의한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타결되어 농수산물에 대한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어촌에 대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발전대책 수립 등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94.1.28 대통령소속하에 설치하여 '94.7.31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제2가나안농군학교의 김범일교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3개 소위원회 30인으로 구성하였으며, 농업경쟁력강화 소위원회는 김성훈 위원장(중앙대교수, 현 농림부장관)등 17인으로 구성되어,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개선대책의 수립 및 관련제도의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를 주요기능으로 하고 있다.

② 위원회 건의내용

'94.6.14 대통령께 보고한 “농어촌 발전대책 및 농정개혁 추진방안”과 제1차 농정개혁추진회의에서 개방화시대에 우리나라 농축산업의 생존권 사수를 위하여 “수입이 개방된 시장여건 하에서 생산자 스스로 식품가공산업에 참여하여 부가가치를 높임으로써 농가소득증대에도 기여하고, 축산식품의 위생관리강화와 안전성확보차원에서 그 관리업무를 1차 생산부서인 농림부로 일원화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다.

③ 조치결과

① 농산식품의 인허가제도는 보건복지부와 협의 개선하여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는 시장, 군수에게 신고만으로 전통식품인 김치, 식혜, 다과 등의 가공판매를 허용하였으며, 주류제조 시 주조사 고용의무를 면제하고, 시설기준 완화 등의 조치를 하였으나, 축산물 가공품 관리업무 일원화에 관하여는 보건복지부와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실태조사와 부처 협의의 거처 조정의견을 제시키로 하였다.

② '94.10.12과 10.19. 국무총리 제2행정조정실 주관(문병학 국장 외)으로 농림수산부(원광식 축산국장 외), 보건사회부(전계휴 식품국장 외), 경기도 화성군(한상기 축산과장), 한국식품개발연구원(임상동 박사) 등이 참석하여 2차례 협의한 결과, 양 부처가 자기의 입장을 종전대로 주장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94.10.30 국무총리 제2행정조정실에서 심의 조정안을 제시하였으며, 조정안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축산가공식품 관리업무 조정방안 검토〉

(행정조정실 '94.10월)

축산물 수급 등과의 관련성, 위생관리상 규제 행정의 방향과 기술적 측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조정방안이 타당함.

- 축산물 1차 가공제품(정육, 포장육, 시유)에 대하여는 농림수산부가, 2차 가공제품(햄, 소세지, 분유)에 대하여는 현행대로 보건사회부가 담당

※ 축산물 중 1차 가공제품으로의 사용비중은 돼지고기의 경우 85%, 원유의 경우 71%

('92년 실적)

- 상기 업무조정제에 따라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처리법 등 관계법령 개정

즉, 축산물가공품 중 1차가공제품과 2차가공제품을 구분하여 양 부처에서 나누어 관장토록하는 중재안으로써, 우리부에서는 1·2차 가공단계 구분시, 위생관리의 일관성 결여와 산업적 차원에서도 동일 공장내 행정관리의 이원화로 민원불편이 계속 야기되므로, 축산식품에 대한 위생관리의 특수성에 따라 선진국과 같이 모든 축산식품은 1차 생산부서에서 일관성있게 관리되어야 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여 조정안을 거부하였다.

④ 『농정개혁 추진 협의회』 업무조정

농정개혁 업무추진과 관련하여 부처간 업무조정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농림부차관을 위원장(박상우 차관)으로 협의회를 구성하였으며, '94.6.29. 제1차 협의회를 시작으로 '95.1.27. 제5차 협의회까지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에 대하여 양 부처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IV. 『행정쇄신위원회』심의 결정과정과 배경

①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에 대한 시도, 단체 건의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로는,

'95.1.9 서울시에서

'95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서 축산물 유통관리 일원화를 행정쇄신과제로 채택하여 건의하였으며,

'95.2 경기도에서

내무부에 정보사항보고서 축산물 가공유통체계 일원화를 요망하였고,

'95.3.20 충청남도에서

내무부에 행정쇄신과제로써 축산물가공분야의 농림부 환원을 건의한 바 있으며, 그밖에 대구시, 경상북도 등에서도 행정쇄신을 건의하였다.

② 생산자, 소비자, 유통사업단체로는,

'95.2.28. 한국낙농육우협회에서 농축산물의 가공관리업무를 농림부로 환원조치할 것을 건의하였고,

'95.3.31. 서울유협동조합과 전국 축협유가공조합장 일동이 원유 및 유제품 관리 감독업무를 농림부 일원화를 건의한 바 있으며,

'95.5. 9. 축산기업조합중앙회에서 식육판매업소에 대한 관리 일원화를 건의하였고

'95.7.28.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등 37개 생산자·소비자단체에서 수입식품 안전성 확보를 위한 연대모임을 결성하고, 식품 유통기한 자율화 발표에 대하여 육류 등 농·축산물 가공 유통업무를 보건복지부 관장으로, 농민과

시민의 소리를 외면하는 사유 등에 대한 공개질의와 함께 청와대 국무총리실 등에 공식건의한 바 있다.

'95.9.29. 우리부에서는 행정쇄신위원회와 최동섭 위원에게 농·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의 당위성에 대한 설명회를 통하여 충분한 이해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② 『행정쇄신위원회』심의 의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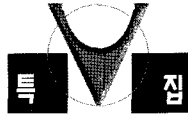
① 행정쇄신위원회 구성·운영

행정쇄신위원회는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 설치되어,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사회적으로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한 행정쇄신위원(14명)과 실무위원(18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정부의 각종 행정쇄신과제들을 심의 확정하여 대통령께 보고 후 관계부처별로 시행토록 하는 자문기구이다.

② 행정쇄신과제 채택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축산물 가공업무 일원화에 대한 시·도 단체의 계속되는 건의에 따라, 축산물 가공식품 관리업무를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안을 행정쇄신과제로 채택하기에 이르렀으며,

'96. 2.26 33개 시·도, 시·군, 관련단체 및 연구위원회에 동 과제에 대한 의견을 문의한 바, 보건사회부와 산하기관·단체인 한국식품위생연구원과 한국식품공업협회를 제외하고는 농림부를 비롯하여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경북, 경남, 전북, 전남, 포항, 횡성, 정읍시(군) 등 모든 행정기관과 축협중앙회, 한국낙농육우협회, 전국낙농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유가공협회, 대한양계협회, 한국양봉협회, 대한양돈협회, 축산기업조합중앙회, 한국육체가공협동조합, 축산물위생처리



협회, 한국축산부산물업중앙회 등 단체와, 행정쇄신 연구위원 등이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행정쇄신안에 동의하였다.

③ 제119차 행정쇄신 실무위원회 개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96.4.24 16:00 실무위원회를 개최하여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일원화”에 대한 행정쇄신과제를 심의하였다.

실무위원은 강봉균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을 위원장으로 하여 김금래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김덕봉 행정쇄신위원회 행정실장, 김일섭 삼일회계법인 대표, 박용환 총무처 기획관리실장, 석영철 내무부 차관보, 신대균 경실련 국민고충처리위원, 안문석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 안병우 재정경제원 기획관리실장, 오두현 한국소

비자보호원 부원장, 이민희 변호사, 이주형 한양대 환경계획학과 교수, 이해경 연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강환 태일정밀(주) 대표, 정수부 법제처 행정법제국장, 정용덕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정판영 세무사, 최병선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등 18명이다.

참고인으로는 농림부 측에서 배상호 가축위생과장, 축협중앙회 박수영 상무, 농촌경제연구원 유철호박사, 낙농육우협회 김인식 부장이 참석하여 찬성 입장 설명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 측에서는 식품정책과장, 식품연구원 송인상 부장이 참석하여 반대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대구시 배영찬 축정계장, 강원도가축위생시험소 남상헌 시험과장 등이 참석하여 찬성발언을 하였다.

회의결과 의결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제119차 실무위원회 ('96.4.24) 의견 ◇

- 축산물가공식품의 인허가 및 관리감독권한을 농림부 소관사항으로 변경
 - 축산물가공업을 식품위생법의 식품제조가공업에서 분리하여 농림부 소관사항으로 함.
-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위생 등 제조공정관리도 농림부에서 수행
 - 다만, 축산식품에 대한 안전규격기준은 농림부가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제정토록하며, 소비자보호 및 위생검사를 철저히 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청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있을 경우 위생확인검사를 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

국무총리실 행정조정실에서는 '96.5.13. ~ 5.15. 농림부, 보건복지부와 합동으로 전북도청, 이천시청, 서울우유조합, (주)하림 계육가공장 등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에 대한 현지실태조사를 하였으며, 농림부로 일원화하는 행정쇄신안에 동의함을 재확인하였다.

④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 심의

재정경제원에서는 '96.5~12월, '96 국가정책개발사업 연구과제로 한국식품개발연구원(KEDI)으로 하여금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업무의 효율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선진 각국의 축산식품관리실태에 대한 비교분석 결

과와 축산식품의 특수성에 따른 위생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국제경쟁력 향상을 위해서는 농림부에서 관리함이 타당하다고 검토 보고하였다.

⑤ 제120차 행정쇄신위원회 개최

행정쇄신위원회에서는 '97.2.28 행정쇄신위원회 본회의를 개최하여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 일원화”에 대한 행정쇄신과제를 심의하였다. 심의위원은 박동서 위원장(서울대 행정대학원 명예교수)외에 과수일 서울대 경영대학장, 김원 서울시립대 교수, 김유성 서울대 공법학과 교수, 김재철 동원산업회장, 노정현 한국행정연구원장, 박우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박정희 서울 YWCA 사회문제위원장, 배병휴 매일경제신문 논설주간,

윤동운 한국정보문화센터 이사장, 인명진 바른언론 시민연합 집행위원장, 정정길 서울대 행정대학원장, 전병태 부산대 공법학과 교수, 최동섭 한국산업개발연구원 고문 등 1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인으로는 농림부에서 이관용 축산국장, 배상호 가축위생과장, 소비자를 위한 시민의 모임의 강광파 이사, 낙농우유협회 김인식 전무, 축협중앙회 박수영 상무 등이 참석하여 행정쇄신과제에 대한 설명과 찬성발언을 하였으며, 보건복지부에서는 식품정책과장, 박종세 독성연구소장 등이 참석하여 반대 입장을 설명하였다. 그밖에 서울시 이병동 위생계장, 강원도 남상현 수의계장, 경기도 이성식 수의계장 등이 찬성 발언을 하였으며, 심의·의결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20차 행정쇄신위원회 심의 의결 내용 ◇

종래 이원화되었던 축산물가공식품 관리체계 (생산 도축 - 농림부, 가공 유통 판매 - 복지부)를 변화하는 대내외 환경에 맞추어 축산물 가공식품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주관 책임 부서를 농림부로 일원화 함.

- 농림부는 축산물에 대한 종합적 일관적 지도 관리 차원에서 가공식품생산에서 판매까지, 전과정에서의 인 허가, 지도 감독 등 제반 행정적 업무 및 위생검사업무를 관할
- 보건복지부는 제3자적 입장에서 최종 판매단계의 축산물가공식품에 대한 검사에 참여
 - 검사(조사)결과 발표는 농림부와와의 사전 협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공표
 - 각종 위생관련 기준은 보건복지부와와의 합의를 거쳐 농림부가 제정 개정

⑥ “행정쇄신 확정과제”의 관계부처 승부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는 '97.4.7. 제120차 행정쇄신위원회에서 확정된 “축산물가공식품관리업무일원화” 방안이 차질 없이 후속 추진 되도록 하기 위하여 축산물위생처리법과 식품위생법을 '97년내에 각각 개정토록 농림부와 보건복지부에 통보했으며, 특히 각 부처에서는 대통령께 건의 확정된 행정쇄신과제를 산하 및 일선기관과 관련단체·협회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신속

하게 전파하여 관계자들이 쇄신내용을 이해하고 정부의 행정쇄신작업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따라 농림부에서는 '97.4.9. 시·도 및 축산관련단체 등 49개 기관에 축산물가공업무일원화 추진방침을 공문 시행하고, 4.10일에는 축산신문사 주관 하에 축산관련학계 및 단체장이 참여하는 추진협의회를 구성·개최하여 앞으로의 추진대책 등을 협의하였다.

계속